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바란다

전국상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조 옹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교장

최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인적자원관리와 개발 개념은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서 개발의 수요자를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중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교육과 훈련, 개발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의 다양한 접근 방법은 때로 혼란스럽다. 그러나 최근 몇 차례에 걸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주관한 HRD정책포럼을 통해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논리들이 정리되고 다듬어지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서구에서는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형성, 그리고 노동운동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관리라는 초기의 발전단계가 일반사회에 스며드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20세기에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기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행동과학과 조직개발을 기반으로 인적자원개발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인 직능원에 바란다면, 서구사회의 HRD 발전단계를 우리 나라의 문화풍토에 그대로 접목하려는 시도보다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신문화풍토에 서구사회의 발전된 논리와 사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할 수 있을까”에 관한 실용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열거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직업교육을 천시하는 문화풍토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직업교육을 시작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관준민비와 사농공상의 인문숭상 풍토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직업교육을 누구나 기피하고 있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이 가는 곳이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인식하고 있는 한 올바른 인적자원관리와 개발은 처음부터 어렵게 되어 있다.

서구사회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등으로 직업에 관한 수평적 의식이 자리 잡은 데 비해서 우리 나라는 봉건사회에서 곧바로 산업사회로 접어들었기 때

문에 직업에 관한 수직적 의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근세사에서 갑오개혁을 시민혁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친일정부라는 인상 때문에 시민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업교육을 바라보는 수평적 사고를 지닌 서구사회와 직업교육을 천시하는 수직적 사고구조를 지닌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관리는 직업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에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직업교육체제 전반에 걸쳐 논하기보다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국한시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실업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본 인적자원관리는 인문과 실업의 균형발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인문과 실업의 불균형 형태는 인문은 너무 몰려서 문제이고 실업은 너도나도 기피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인문중심의 문화풍토 속에서는 고학력 선호가 자명한 이치이고 핵가족화와 개인소득의 증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길 희망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기초기능을 익히고 취업을 해서 만족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고급산업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같은 계열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제는 대학 입학수능시험이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면서 예술계와 체능계열에게만 계열 선택을 허용하고, 오직 실업계 고등학교만을 선택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비현실적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를 고집하는 데 있다.

우리 나라 문화풍토 속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선택 기회를 주어도 누구나 인문계열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히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어느 부모가 자식을 실업계 고등학교에 보내려 들겠는가.

능력이 없어서 대학에 못 가는 것하고 원천적으로 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대학입학수능시험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이 계열선택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교육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벗어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을 여러 차례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해 오고 있으나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보다 대학에 특별전형제도를 권장해 보겠다는 식의 미온적 반응이 있을 뿐이다.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농·공·상·수·해운계 대학에서 일정 비율(5~50%)을 동일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인문과 실업의 균형 발전을 유지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졸자들이 현재 산업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졸업정원제 실시

에 따라서 탈락자가 다수 발생하자 대학의 반대에 부딪혀서 폐지되었고 지금은 대학입학 수능고사에서 계열선택을 할 수 없도록 제외시킴으로써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재 대학에 권장하고 있는 특별전형은 과거처럼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계열에게 해당되는 전형방법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학은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대입 수능고사에 직업탐구 영역을 설정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반계와 예·체능계 학생들처럼 자신에 맞는 계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균등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농고를 나와서 농과대학을 가지 못하고 공고를 나와서 공과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인적자원개발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바람직한 인간행동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직업교육이란 우리 나라에 필요한 바람직한 직업인 양성이란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인적자원계획과 개발, 그리고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지적인 것처럼 인문과 실업의 불균형 문제는 우리의 오랜 문화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인적자원 계획단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가 신중히 다루어져서 인문편향의 왜곡된 흐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올바른 개발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자아실현을 하게 하는데 있고 자아실현은 일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교육을 받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 고도산업사회에서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내용도 복잡할 뿐더러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교육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체제의 수립이 절실하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생애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중학교에서는 기초 능력과 진로탐색교육을 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는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 직업을 가진 후부터는 평생학습차원에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직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기겠다는 발표로 인해서 직업교육이 마치 전문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학교까지는 진로탐색교육을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직업준비교육을 해야 한다. 당연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직업준비교육기관으로서 출발점이면서도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초기능교육을 중심으로 전문대에서는 심화단계로 대학에서는 고급산업인력 양성단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서로 나누어지면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인적자원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전문대가

중심축이라는 표현은 인적자원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최근 전문대 중심으로 흐르는 예산의 편중 지원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이 문제를 드러낼 때마다 인적자원관리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치료하는 대 중요법을 주로 써왔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당시 7:3 이었던 인문실업 비율을 억지로 5:5로 끌어 올려 보겠다는 정책이 그러했고,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된 실업계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통합형 고등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식이 그러했다. 통합형 고등학교라는 것도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현재 전국의 종합고등학교가 취업과 진학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을 통합이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뿐이다. 굳이 기존의 종합고와의 차이를 두어 설명한다면 인문과 직업반의 계열 이동을 허용하는 형태의 도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대 중반에 평택종합고등학교를 시발로 해서 현재 전국에 150여 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순수공고나 상고 또는 인문고에 비해 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통합형 고등학교 도입과 확산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가 되고 직능원이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연구기관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나타난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의 현실 문제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인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실업계고등학교의 근원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접근해서 효율적인 직업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바란다

김신복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1세기가 지향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생산·유통·활용이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지식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관건은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그밖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국가 인적자원개발(HRD)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도덕성·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고 양성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존·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관리는 교육과 훈련 뿐 아니라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재교육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 매우 광범한 영역을 포함하는 기능이다.

그 동안 학교교육 자체도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되는 기능들도 취약하고 담당부처간에 기능이 중복되거나 갈등이 노출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초에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함과 아울러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종합조정기능을 부여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만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들이 수립·추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타당성이 높은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관리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들을 도출하여 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활동과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행정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 연구기관에서 담당하는 편이 질적 수준이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출연연구기관들이 있지만 인력개발 및 평생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이다. 직능원이야말로 좁은 의미의 교육영역을 넘어서 인적자원개발 및 배분에 관한 포괄적인 영역을 다루는 연구기관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직업교육훈련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다른 어느 연구기관보다도 인적자원개발분야를 광범하게 다루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직능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수행함은 물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여 연구의 영역과 주제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평생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보급,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활동 등과 더불어 관련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격제도의 연구개발, 직업훈련의 평가인정 등의 기존 업무도 교육제도와의 연계 속에서 폭넓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직능원은 교육과 취업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은 물론 배분·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체제를 연구·개발하여 제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개발하는 과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직능원은 설립작업부터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였거니와 앞으로는 두 개 부처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관장사항을 조사연구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직능원의 명칭(특히 영문명칭)을 좀 더 광범한 기능까지 포괄하도록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바란다

서세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1997년에 설립된 이래로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 체제 구축을 위해 우수한 정책 개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 국가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연구·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연구과제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정책 대안들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하여 전문대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문대학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직업교육에 대한 위상 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전문대학은 2년제 단기 고등직업교육기관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대학에 별도의 3-4학년 과정을 두는 Senior College 설치·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Senior College 설치·운영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2년 + 전문대학 2년 + Senior College 2년 + 전문대학원 2년 형태의 연계를 통한 계속직업교육의 통로를 확립하여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난립되어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유형 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종별, 직무별, 업종별로 다양한 직업능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이 2년 혹은 3년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전문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 교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보고서가 정책으로 채택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전문대학 관련 연구과제 수행시에 전문대학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양자의 수요 및 요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산업체의 직종별 직무 분석을 통한 직종별 핵심 역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대학 교육과 산업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간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셋째, 인문학과 실용학문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고등직업교육이 국가 경쟁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전문대학의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반 대학의 BK-21사업과 같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정책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술한국 21사업: Technology Korea 21(가칭)” 등 장기적 재정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기술개발과 연구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여 균형 잡힌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지방 전문대학의 육성을 위하여 대학의 설립 및 정원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유지·발전하기 위해서는 1)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통합적 추진을 주도하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2) 연구·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구 책임자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질 높은 성과 산출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3) 연구 산출물의 질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지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평생직업교육훈련 분야 정책을 지원하는 Think-Tank 기관으로 전문화되길 기원한다.